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공통 경험

개발독재의 양면성 및 부정적 측면에 관하여

20200422 이수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형태는 서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바로 '경제적 발전'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발전'의 결핍을 정당화하는 '개발독재'이다. 당시 민주주의 의식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경제발전모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경제적 발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치 민주화를 저해했으며, 특권층을 제외한 국민들은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 개발독재의 이 두 가지 면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독재는 정치적 발전의 결핍을 정당화한다. 개발독재는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발전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민당 일당 지배 형태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였지만 실은 공산당 일당 독재였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물론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지만, 집권당의 기저 이념이었을 뿐 사회 발전에 기여할 만큼 그 사상적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 그 어떤 것도 발전시키지 못했던 정치 형태인 개발독재는 비판받아 마땅할 체제였다. 또한 개발독재 자체가 정치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만 중시하고 정치와 사상은 무시한 전략 내에서 정치적 발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독재를 택한 집권당에게는 정치적 개혁 혹은 혁명을 시도할 필요성조차 없었다. 여기서 초점은 이러한 정치적 발전의 결핍을 경제적 발전으로 정당화해왔다는 점에 있다. 즉 개발독재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만으로 과대평가되었다.

둘째, 개발독재는 오로지 경제발전만을 보고 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발전을 옳은 방향으로 이끈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근대'에서 '현대'로 바뀔 만큼 동아시아 각국에서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 그 과정은 폭력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초기부터 계엄령을 자주 선포하였고, 정권 교체 또한 매번 군부 쿠데타를 통해 이루어졌다. 폭력적 수단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절대 평화로울 수만은 없다.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발전의 속도를 급격하게 향상시킨 개발독재는 현대에 '평화'에 관한 숙제를 남기고 사라졌다. 한국은 일본과 일제강점기 시절 감정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했고,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에는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이념 차이로 생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로 오래 묵힌 문제들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개발독재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제발전의 방향성조차 잘못된 것이었다. '독재'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개 개인 혹은 일당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즉 경제발전은 핑계, 정당화 수단일 뿐이었고 개발독재의 경제발전은 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방향성 자체가 옳지 않은 형태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폭력적이고 방향성이 잘못된 긴 과정을 생략하고 ‘경제적 급속도 발전’이라는 결과만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비약이다.

## 198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공통 경험

같은 시기에 극적인 변화를 맞은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20200422 이수빈

냉전이 종결되던 198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도 각국 모두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변화의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과 대만은 1987년부터 정치 민주화의 길을 걸었지만, 반대로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일본은 1991년 버블 붕괴로 경제적 번영을 상실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한 개발독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라는 명확한 계기가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나타난 극적인 변화는 뚜렷한 공통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절대 시기적 우연은 아니며 그 공통 원인을 ‘냉전 종결’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냉전기는 다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긴장 상태인 ‘냉전’과 실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열전’으로 나눌 수 있다. ‘냉전기 후반’ 즉 열전기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각국이 왜 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우선, 중국에서는 1946년 국공내전이 발생했다.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며, 국민당은 대만으로 이동했다. 약 30년간 개발독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결되자, 1980년대 후반 중국과 대만은 각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선택하여 현대까지 이르렀다. 한국과 일본도 유사한 레퍼토리를 따랐다.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을 겪은 뒤 분단 상태로 약 30년간 개발독재를 감행해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다. 마찬가지로 냉전 종결 이후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6.25 전쟁의 경제적 수혜를 받고 자민당의 일당 독재가 이어지면서 약 30년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그간의 버블이 붕괴되고 자민당 체제가 무너지면서 일본 또한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은 모두 개발독재에 의해 경제발전에만 신경쓰고 있었으나, 냉전기가 종결됨에 따라 경제발전 외의 문제들 즉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가 자연스럽게 왔던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이라는 시기는 각국이 우연히 맞물린 것이 아니라 ‘냉전 종결’로 인해 나타난 필연적인 정치적, 이념적 선택의 시기이다.